

JPI Research Forum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와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와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I. 서론

II. 유럽회의주의의 기원과 전개

III. 유럽의회에서 유럽회의주의의 문제

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V.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요약문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반발로 드러난 현상이다. 유럽회의주의는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주의 결핍’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되는 유럽의회는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이론적 전개를 살펴본 후, 이어서 유럽의회의 정파별 구성 속에서 유럽회의주의 세력의 배열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2014년 선거에서 이러한 배열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의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회의주의 정파의 전개와 활동은 향후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뿐 아니라, 유럽과 관계 맺는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지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다.

I. 서론

2013년 1월 22일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Daveid Cameron) 총리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못할 경우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천명하면서¹ 우리나라에서도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² 2013년 말에는 친 유럽통합 성향의 유럽의회 정치 그룹 ‘유럽 자유주의&민주주의 연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의 총재이자 전 벨기에 총리인 기 베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가 유럽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유럽회의주의를 크게 우려하면서, “유럽연합이 금융위기 이후 소위 은행과 시장에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로회의주의자들의 발호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³

유럽회의주의는 유럽통합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유럽인들의 삶의 기저에 심각한 변화를 야기한 것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유럽 각국에서 조금씩 솟아나고 있는 민족주의 관념의 부활인지, 또는 유럽연합의 통합과 범위에 대한 경계심에서 나온 속도 조절 차원의 담론인지, 또는 그보다 아주 깊이 철학적 차원의 ‘유럽’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제도 중 이념적 구상이 가장 폭넓게 교환되고 경쟁하는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각 회원국 차원의 유럽회의주의 연구는 몇몇 사례를 통해 검토된 바 있으나, 유럽의회 차원의 회의주의는 깊게 논의된 바가 별로 없다.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고찰은 유럽의 현재와 미래의 통합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뿐 아니라, 유럽의회 내의 회의주의 연구는 갈수록 권한이 커지고 있는 유럽의회의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¹ 관련 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But if there is no appetite for a new Treaty for us all then of course Britain should be ready to address the changes we need in a negotiation with our European partners. The next Conservative Manifesto in 2015 will ask for a mandate from the British people for a Conservative Government to negotiate a new settlement with our European partners in the next Parliament.” David Cameron’s EU speech in ful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eu/9820230/David-Camerons-EU-speech-in-full.html>; “David Cameron speech: UK and the EU”,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1170265> (검색일: 2014.07.10).

² 우리나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Euroscepticism’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크게 구분하자면, 김상수(2010)는 ‘유럽혐오주의’로 김신규(2008), 최진우(2012)는 ‘유럽회의론’으로 번역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Scepticism을 ‘怀疑態度’로 일본어에서는 ‘懷疑主義’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혐오’보다는 ‘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³ “Rising euroscepticism must be a wake-up call for Europe” 2013.11.18. Euobserver.

II.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의 기원과 전개

1. 기원 및 의미

철학적인 의미에서 회의주의(Scepticism)란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이나 사실, 의견, 믿음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일컫는다.⁴ 철학적 의미의 회의주의가 인간이 가진 오감(五感)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면, 정치적 의미의 유럽회의주의는 정치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의 실체를 부정하고 통합 과정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유럽연합을 부정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점점 초국가화되면서 정치적 절차의 효율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관료주의 성격이 짙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폐해에 대한 경계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학자들을 통해 시도된 바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⁶

| 강한 회의주의(hard euroscepticism) | 약한 회의주의 (soft euroscepticism)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재에 부정적이며 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 기왕에 회원국이 되었다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며, 회원국에 잔류하는 동안만큼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통합 관련 정책은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 -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유럽의회의 EFD그룹(the Europe of Freedom and Democracy gro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으며 자국이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것에도 반대하지는 않음 - 다만,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정책 중에 선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함. 가장 대표적인 반대 정책은 유럽연합이 통합의 심화를 거듭해 연방국가(federal state)가 되는 것. - 유럽의회에서는 영국의 보수당 등이 후원하는 중도우파 성향의 ‘보수주의·개혁그룹(the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과 좌파 성향의 ‘유럽좌파-노르딕 녹색 연합(Confederal Group of Gauche Unitaire Européenne/Nordic Green Left)’등 |

⁴ R. H. Popkin, *The History of Skepticism from Erasmus to Descartes* (1968); C. L. Stough, *Greek Skepticism* (1969); M. Burnyeat, ed., *The Skeptical Tradition* (1983); B. Stroud,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Skepticism* (1984).

⁵ 사실, 회의주의는 ‘반대’보다는 ‘의심’ 또는 ‘유보’의 뜻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유럽회의주의’는 실제 정치에서 유럽통합과정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Katz 2008, 154).

⁶ Taggart and Szczerbiak 2008, 22-27.

전자가 유럽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유럽연합을 자국의 이익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강한 회의주의’ 진영에서는 종종 ‘회의주의’ 대신 ‘유로-현실주의(Euro-realism)’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하고, ‘약한 회의주의’ 진영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정통의 복원에 있고 현재의 유럽연합을 비판한다는 맥락에서 ‘유로비판주의(euro-critical)’라고 부르기도 한다.⁷

그러나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개괄적 성격의 용어 정의보다는 그들의 내적 신념이나 정책적 차이를 보다 특징화하여 이해하는 관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즉, 유럽회의주의를 ‘실용적 회의주의(Utilitarian Euroscepticism)’, ‘정치적 회의주의(Political Euroscepticism)’, ‘가치 지향적 회의주의(Value-based Euroscepticism)’, ‘문화적 반유럽주의(Cultural anti-Euroscepticism)’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기도 한다. ‘실용적 회의주의’는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다. 1960~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이뤘던 시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들어 유럽경제가 침체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개념화되었다. 즉, 유럽경제화폐공동체(EMU)와 유럽연합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미치면서 회원국의 경제적 국익에 대한 고려와 민족주의적 반동이 국내 여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정치적 회의주의’는 유럽통합과 연관된 여러 기구와 제도가 ‘초국가주의’ 성격을 띠면서 이에 반발하는 관념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여러 제도가 당초 회원국들이 통합에 합의한 내부 시장 관련 정책이나 경쟁 정책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 정책을 수행하게 된 것이 주된 등장 이유다. 즉,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주권과 일정 영역에서 충돌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Leconte 2012, 46-57). ‘가치 지향적 회의주의’는 유럽연합의 각 기관과 제도가 유럽사회가 갖는 사회적, 집단적 선호뿐 아니라 개인의 영역이 갖는 가치까지 간여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에서 드러났다. 예컨대, 낙태, 이혼, 소수자의 보호, 개인의 자유와 공적 질서 사이의 균형 등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의 간여가 심해지면서 나타나게 되었다.(Madeley & Sitter, 2003) 끝으로 ‘문화적 반유럽주의’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명화의 맥락에서 ‘유럽’이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Leconte 2010: 61) 실제로 유럽은 겉보기와는 달리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유럽인으로서의 동질적 가치(homogeneous values), 규범, 선호는 국가 수준의 선호나 전통과는 구분된다고 본다. 때문에 유럽인들 사이의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무역지대 이상의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 같은 시각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은 결국

⁷ 영국 노동당 출신 유럽의회의 의원 Tony Benn의 언급.

유럽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넘어 규범적 통합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2. 유럽회의론의 시대별 전개

유럽회의론을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1950년대 중반: 유럽연합의 태동기였던 1950년대 중반은 유럽 정치지도자들에게 ‘유럽회의주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기.

사회주의계 정당들은 대체로 유럽석탄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은 서유럽 중심의 통합은 결국 유럽뿐 아니라 독일의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크게 우려하였고 실제로 의회에서 석탄철강공동체 가입과 유럽방위공동체(EDC) 가입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계열 지도자들도 양 기구의 가입에 기권표를 던졌으며 유럽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동조자였던 벨기에의 사회주의자들도 로마조약의 비준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Leconte 2010, 102-103). 중도 우파(center-right) 계열 정당들도 유럽통합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계열의 중도 우파 의원들 중 슈망플랜과 EEC에 찬성한 이들은 1/3에 불과하였다(Parsons 2006). 독일의 경우 기독교민주당(CDU)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ECSC가 초국가주의 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총리였던 아데나워는 패전으로 분단된 서독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방에 하루빨리 편입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였지만, EEC의 고위기구(High Authority)가 지나치게 초국가주의(supranationalism) 성격을 띠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Küsters 1989). 같은 우파 계열의 자유주의 이념의 독일자유당(Freiheitliche Deutsche Partei: FDP)은 유럽통합이 독일 통일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독일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로마 조약에 반대하였다(Zellentin 1967; Lot 1989).

b. 1960~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회의주의가 상대적으로 수그러들었던 시기

이 당시 유럽회의주의가 소강상태를 보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ECSC에 비해 EEC의 초국가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꺾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드골이 집권(1959~1969)하면서 EEC의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1965년 ‘공석의 위기(Politique de la chaise vide)’에서 양측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⁸ 결국 드골이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초국가적인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SEA)가 발효될 때까지, 약 30여 년간 유럽(경제)공동체 내에 이렇다 할 제도적 개혁이 없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이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은 국내법과 유럽공동체법 간에 결정적인 충돌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즉, 유럽화(Europeanization)가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셋째, 각 회원국의 국내 정당 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유럽회의론’ 같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정당체계에 도전하는 세력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Leconte 2010: 43-44).

c. 1980년대 말부터 유럽회의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

1980년대 말부터 유럽회의론은 힘을 받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계기는 1987년에 발효된 ‘유럽단일의정서’였다.⁹ 단일유럽의정서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 공동체를 완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가중 다수결 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 노동 조건 개선, 환경 보호 등 비전통적 의미의 통합 부분까지 EEC의 범위 안으로 흡수하려 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의 정치 엘리트들은 EEC의 개혁이 결국은 정치 공동체로 진입하는 조절 과정이라고 이해하였으나 유럽회의주의자들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조차 아직 EEC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예컨대 1988년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의 브뤼쥬(Brugge) 연설은 이 같은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였다.

...We have not successfully rolled back the frontiers of the state in Britain, only to see them reimposed at a European level, with a European superstate exercising a new dominance from Brussels...

- 1988년 벨기에 브뤼쥬의 ‘College of Europe’에서 행한 연설-¹⁰

⁸ 1965년 EEC의 발터 할스타인 집행위원장이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을 제안하며 농업 분야에서 회원국과는 독립된 자체 제원으로 지원 자금을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예산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며 이사회의 가중다수결로 중요 내용을 결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농업 비중이 큰 프랑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 당국은 항의의 뜻으로 브뤼셀에 참석 중인 자국의 대표단을 철수케 하였고 6개월간 프랑스는 EEC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1966년 1월, 룩셈부르크 타협(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비토권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위기를 벗어났으나 이는 회원국에 대해 EEC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⁹ 1957년에 체결된 로마 조약의 첫 개정(revision). 1985년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이 비관세장벽제거프로젝트를 이사회에 제출한 것이 시초였다. 1986년에 회원국들이 서명하였고 198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독일에서도 1980년대 후반기부터 연방주(Land)를 중심으로 유럽공동체(EC)의 권한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EC의 권한이 직업교육, 환경, 보건, 국가부조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였다(Leconte 2010, 45).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EC의 권한을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으로 묶어 두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¹¹ 이 조약의 비준을 둘러싸고 덴마크와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민투표 결과는(각각 50.7%와 51%로 통과) 유럽인들이 유럽연합의 권한 확대에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후 유럽연합의 권한 확대는 경제통화동맹(EMU), 공공외교안보정책(CFSP), 사법내무협력(JHA),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로마조약이 예정하던 경제 공동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었다. 특히 유럽연합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이나 규범주의적 대외정책(normative power), 유럽화(Europeanization) 등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주권 국가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 같은 신개념의 등장은 유럽회의주의 관련 논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다.

3. 주요국가의 유럽회의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가 목격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회의주의가 정치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실제로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논란은 영국이 처음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부터 등장한 뿌리 깊은 정치적 유산이다. 1973년 1월,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가 이끌던 보수당 내각은 영국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시켰으나, 1974년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이 과연 EEC의 회원국 자격을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동당은 총선에 앞서 영국의 회원국 지위 유지 여부를 국민투표(referendum)에 부치겠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이다. 막상 국민투표 표결을 강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롭게 집권한 노동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1975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유럽경제공동체에 잔류하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67.2%:32.8%).

¹⁰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7332> (검색일: 2014.07.20).

¹¹ 보조성의 원칙은 리스본 조약의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5조(3항)에 계승되었다.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areas which do not fall within its exclusive competence, the Union shall act only if and in so far as the objectives of the proposed action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the Member States, either at central level or at regional and local level, but can rather, by reason of the scale or effects of the proposed action, be better achieved at Union level.’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강한 회의론’이 영국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것은 2004년 영국독립당(UKIP)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면서부터다. 2009년 선거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독립당은 16.5%를 득표하여 영국에게 주어진 의석 73석 중 13석을 차지하였다. 이는 2004 선거에서 0.3%의 지지에 그쳤고 상원에서 세 석, 하원에서는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정당치고는 괄목할만한 의석 획득이다.¹² 한편, 2009년 10월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대표가 “보수당이 집권하면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협상(renegoti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부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보다 더 힘을 받게 되었다(김신규 2010, 218). 영국 정부는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대해서도 이미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고,¹³ 카메론 총리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조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영국의 대중 여론도, 2010년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며,¹⁴ 이를 반영하듯 카메론 총리는 2013년 1월 연설에서 차기 영국 총선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가장 강하게 외치며 영국민들의 국민투표를 주장했던 독립당은 2013년 5월 여론조사에서 22%의 지지율을 보였다.

독일은 사회주의 계열 세력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유럽 통합에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독일은 유럽통합의 모델이자 또한 유럽연합의 기관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시민당(SPD)은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측면이 강했고, 자유민주당(FDP)은 통합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기민당(CDU)은 유럽통합에 보다 친화적이다(Lees 2008, 17). 유럽회의론에 보다 적극적인 쪽은 구 동독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과 이를 다시 계승한 독일좌파당(Die Linke)이다.¹⁵ 이들은 서구화(Westernization)와 자본주의 문화에 여전히 적대적이며 구 서독의 정치적 자산이 독일을 대표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는 강력한 의회의 힘이 대표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화동맹에 반대하며 군사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략에 독일 병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코소보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Lees 2008, 21).

¹²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은 보수당 25석, 노동당 13석, 자유민주당 12석 등을 차지하였다.

¹³ 2007년 리스본의 조약 체결 후 Jerónimos Monastery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할 때도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약에 대한 서명도 몇 시간이 지난 후 별도의 장소에서 행하였다.

¹⁴ “56% of Britons would vote to quit EU in referendum, poll finds,” *The Observer*, 2012년 11월 17일.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2/nov/17/eu-referendum-poll> (검색일: 2014.07.20).

¹⁵ PDS는 구 동독의 SED(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를 계승하였다.

프랑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럽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회의론이 강하게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드골 시대의 프랑스는 유럽경제공동체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오히려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과 집행의 중요한 변수였다. 또한 프랑스 국내 여론에서도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그다지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유럽회의주의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1984년 유럽의회 선거였다.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이 이끄는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11%에 이르는 지지를 받음으로써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¹⁶ 당초부터 르 펜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유럽의회 선거는 오로지 ‘민족주의(nationalism) 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양자 대결일 뿐이라고 규정하였다(Grunberg 2008, 39). 사실 르 펜의 이 같은 방향성 규정은 전통적으로 세 개 정당으로 분립된 프랑스 정당 정치 구조에서 국민전선이 선전한 이유가 되었다.¹⁷

이런 가운데, 2004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대거 유럽연합에 편입되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유럽회의론이 싹트고 있다. 대표적인 정당은 체코의 ‘시민 민주당(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이다. 전 체코 대통령 바클라프 클라우스(Václav Klaus)가 1991년 창당한 정당으로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 계열의 정책을 추구한다. 독일의 기민당이나 프랑스의 대중운동연합(UMP) 보다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다. 예컨대 정강 정책이 담고 있는 것은, 낮은 세율, 가족의 중요성 강조, 건전한 공공 재정, 관료주의 타파, 보다 나은 조건의 기업 환경, 대서양 관계의 확보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조건들은 차라리 영국의 보수당에 밀접한 의제를 제공한다. 실제로 시민 민주당은 2006년 영국의 보수당과 함께 유럽의회에서 ‘Movement for European Reform’를 결성하여 중도우파, 시장 친화 그리고 유럽회의주의 정파의 한 축이 되었다.¹⁸

4. 유럽인들이 보는 유럽의 미래에 관한 전망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저해하고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면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해 유럽인들이 갖는 전망을 통해 잘 드러난다. 정치적 결사체로서 유럽연합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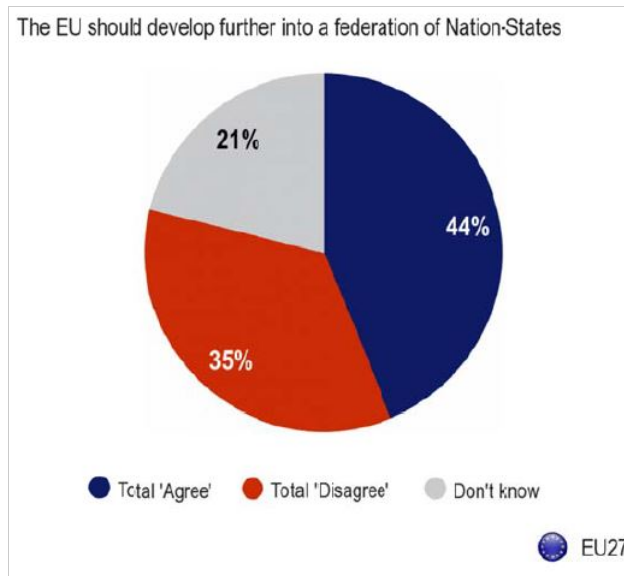
¹⁶ FN의 뜻이 ‘통합 유럽에 거족적 반대(National Opposition Front for a Europe of Nations)’라는 설이 있다(Grunberg 2008, 39).

¹⁷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정당은 보수 우파 성향의 드골주의 정당인 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과 사회주의 성향의 PS(Parti Socialiste) 그리고 중도성향의 UDF(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로 나뉘었다. RPR은 2002년에 UMP로 계승되었고, UDF는 2007년에 Mouvement démocrate로 이름을 바꾸었다.

¹⁸ Movement for European Reform의 구성원들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으로 흡수되었다.

을 보다 심화 발전시켜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볼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 같은 전제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회원국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가 <표 1>과 같이 발표된 바 있다.¹⁹

<표 1> 유럽연합의 미래에 관한 질문(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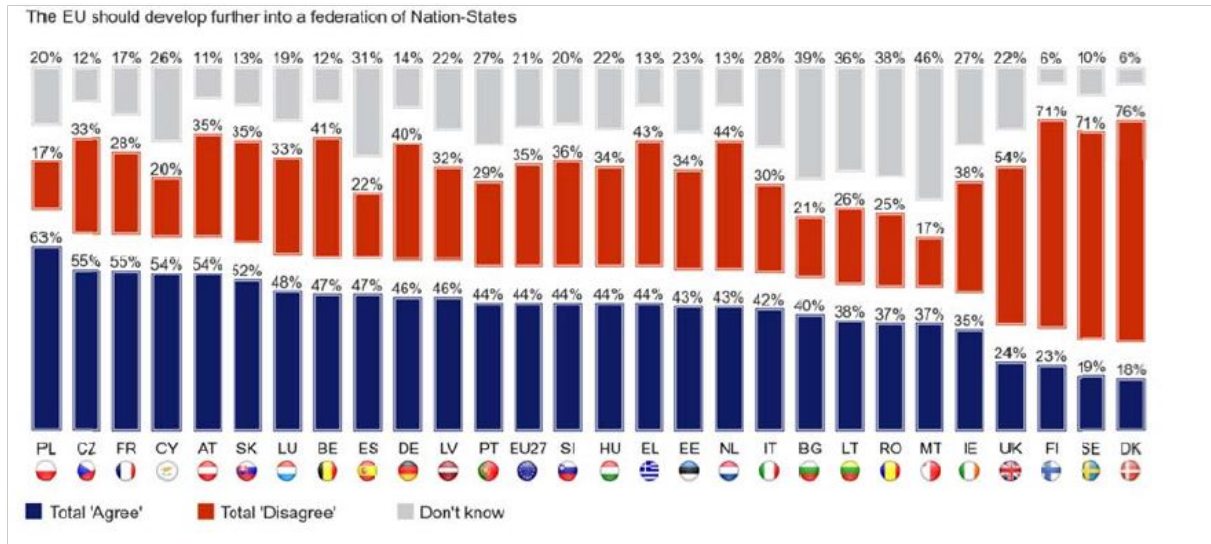


출처: STANDARD EUROBAROMETER 78 (p. 92).

도표에서 보듯이 유럽연합이 연방국가(a federation of nation-states)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35%였다. 이러한 결과를 회원국별로 좀 더 세분하여 나누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에 따르면 덴마크(76%), 스웨덴과 핀란드(71%), 영국(54%) 등의 순서로 유럽연합이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통합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던졌고, 폴란드(63%), 체코(55%), 프랑스(55%)의 순서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럽연합의 통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여 아직도 많은 유럽인의 유럽통합이 국가 수준으로 심화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¹⁹ 2012년 11월 기준.

<표 2> 유럽연합의 미래에 관한 질문(회원국별)



출처: STANDARD EUROBAROMETER 78 (p.93)

III. 유럽의회에서 유럽회의주의의 문제

1. 유럽의회의 성격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제1제도(institution)이다.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에서 유럽의회를 첫 번째 순위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제도 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가장 강한 유럽의회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⁰

유럽의회 의원은 5년마다 매 5~6월에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에서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14년 5월 22~25일에 치러졌으며 현재 의원 수는 의장 포함 751명이다.²¹ 초기에는 ECSC, EEC, Euratom 등이 각각의 의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1962년에 지금의 이름인 ‘European Parliament’로 통합되었다. 당초에는 자문기관의 성격이 강하였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었으나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후에는 입법권을 각료사회와 공유하고, 집행권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권한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초창기에는 회원국

²⁰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ommissi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Court of Auditors 순이다(Art.13).

²¹ 앞선 선거는 2009년 6월에 치러졌으며 의원 수는 766명이었다.

의원들이 겸직하였으나 1979년부터는 직접선거로 바뀌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정당들의 특성이 투영되어 있으며, 선거를 통해 누구라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집행위원회와는 달리 관료적 성격도 적다. 이 같은 유럽의회의 성격은 유럽 각지의 다양한 주장들이 수렴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2. 유럽회의주의 정파

주권 국가가 모인 제도의 의회이기 때문에 유럽의회는 국내 의회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치그룹 또는 정파(Political Group)’의 존재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파를 형성하며 정치적 성향이 유사하거나 같으면 국가를 초월하여 이념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치 그룹은 일견 정당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내 정당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아이디어로 결집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느슨한 정책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정파와 녹색당 계열의 정파가 연합한 ‘GUE-NGL’은 그 같은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그룹이 국내 정당과 가장 큰 차이는 선거를 치르고 새로 정파를 구성할 때마다 이념성향에 따라 구성원과 명칭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 획득이 목표인 국내정당과는 달리 정치그룹은 이념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각 정치 그룹은 국내 정당들과 비슷한 이념형을 갖는데, 예컨대 보수주의 기독교 계열, 사회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 환경 계열, 무당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4년 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친 유럽적인 성향의 정치 그룹은 EPP(European People’s Party), S&D(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ALDE(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등이며, EFDD(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UE-NGL(Gauche Unitaire Européenne/Nordic Green Left) 등은 유럽 회의론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의석수로 분류하여 2009년 선거와 2014년 선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43%, 총의석수 766석)



<표 4>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43,09%, 총의석수 751석)



출처: European Parliament²²

²²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en/election-results-2014.html>;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en/election-results-2009.html>(검색일: 2014.07.20). 각 정치그룹에 소속된 의원 수는 의원들의 정파 이동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

유럽의회에서 유럽회의주의로 가장 큰 정파를 이루고 있는 정치그룹은 우파적 성향의 ‘유럽보수주의·개혁그룹(ECR)’이다. 2009년 선거에서는 57석(7.44%)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 선거에서는 70석(9.32%)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통적 지지 세력을 확보한 ‘유럽 자유주의&민주주의 연맹(ALDE)’을 넘어 제 3당으로 약진한 사례이다. 또한 다른 회의주의 성향의 정파인 ‘자유와 직접민주주의 유럽(EFDD 또는 EFD)’은 같은 기간, 31석(4.05%)에서 48석(6.39%)으로, GUE/NGL은 35석(4.57%)에서 52석(6.92%)으로 도약한 반면, 주요 정파인, 유럽인민당(EPP), 사회민주당(S&D), 유럽 자유주의&민주주의 연맹(ALDE)은 모두 의석을 고르게 잃었다(회의론: 123석, 16.05% → 170석, 22.63%).

여기서 유럽회의주의의 정파의 성향을 보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유럽 보수주의·개혁 그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ECR은 2005년에 결성되어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그룹에 속한다. ECR의 강령은 ‘프라하 선언(Prague Declaration)’으로 알려졌다.²³ 이 강령에 따르면 ECR은 우선 자유무역과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며 개인의 자유, 민주적 책임성,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본래 원칙인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을 중요하게 여기며 연방주의(federalism)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유럽연합의 지나친 관료주의에도 반대하며 유럽연합의 제도나 사용하는 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관리, 망명자 처리를 남용하지 말 것을 천명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ECR은 5번째 크기

²³ - Free enterprise, free and fair trade and competition, minimal regulation, lower taxation, and small government as the ultimate catalysts for individual freedom and personal and national prosperity.

- Freedom of the individual, mor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greater democratic accountability.
- Sustainable, clean energy supply with an emphasis on energy security.
-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as the bedrock of society.
- The sovereign integrity of the nation state, opposition to EU federalism and a renewed respect for true subsidiarity.
- The overriding value of the transatlantic security relationship in a revitalised NATO, and support for young democracies across Europe.
- Effectively controlled immigration and an end to abuse of asylum procedures.
- Efficient and modern public services and sensitivity to the needs of both rural and urban communities.
- An end to waste and excessive bureaucracy and a commitment to greater transparency and probity in the EU institutions and use of EU funds.
- Respect and equitable treatment for all EU countries, new and old, large and small.

의 정치그룹으로 비교적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지만, 강한 회의론자라기보다는 약한 회의론자에 가깝다. ECR의 주요 정치 세력인 영국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은 유럽연합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기여만큼 얻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2004년 6대 유럽의회에서는 European Democrats(ED)를 구성하여 친 유럽적 성향의 EPP와 연대하여 활동한 바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자체를 부정하는 강한 회의론자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5> ECR(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의 구성(20014년 선거)²⁴

| 국가 | 정당 명 | 의원 수 | 2009~2014 |
|-------|--|------|-----------|
| 벨기에 | Nieuw-Vlaamse Alliantie | 4 | Gree/EFA |
| 불가리아 | България без цензура(1) ВМРО - Българско Национално Движение(1) | 2 | |
| 크로아티아 | Hrvatska stranka prava dr. Ante Starčević | 1 | |
| 체코 | 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 | 2 | EPP-ED |
| 덴마크 | Dansk Folkeparti | 4 | EFD |
| 독일 | Alternative für Deutschland(7), Familienpartei Deutschlands(1) | 8 | |
| 핀란드 | Perussuomalaiset | 2 | EFD |
| 그리스 | Ανεξάρτητοι Έλληνες | 1 | |
| 아일랜드 | Brian Crowley (개인) | 1 | ALDE |
| 라트비아 | Tēvzemei un Brīvībai/LNNK | 1 | |
| 리투아니아 | Lietuvos lenkų rinkimų akcija | 1 | |
| 네덜란드 | Christen Unie(1) Staatkundig Gereformeerde Partij(1) | 2 | |
| 폴란드 | Prawo i Sprawiedliwość | 19 | |
| 슬로바키아 | Nová väčšina(1) Obyčajní Ľudia(1) | 2 | |
| 영국 | Conservative Party(19) Ulster Unionist Party(1) | 20 | EPP-ED |

²⁴ 2009-2014년 의회에서는 11개 국가가 참여했으나, 2014년에는 20개국으로 증가.

b.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유럽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EFDD)

유럽회의주의 정치 그룹 가운데 ECR보다 극단적인 성격을 지닌 정파는 EFDD(EFD)이다. EFDD의 주축은 영국독립당(UKIP)과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oVimento Cinque Stelle) 소속의 의원들이며 이들이 전체 인원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소속 의원의 회원국 정당 성향은 대체로 분리주의, 이민자 반대 등 극우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EFDD는 다른 어느 그룹보다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표 6> EFDD(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의 구성(2014년 선거)

| 국가 | 정당 명 | 의원 수 | 2009~2014 |
|-------|---------------------------|------|-----------|
| 체코 | Strana svobodných občanů | 1 | |
| 프랑스 | Joëlle Bergeron (개인) | 1 | |
| 이탈리아 | MoVimento Cinque Stelle | 17 | |
| 라트비아 | Zaļo un Zemieku savienība | 1 | |
| 리투아니아 | Tvarka ir teisingumas | 2 | EFD |
| 스웨덴 | Sverigedemokraterna | 2 | EFD |
| 영국 | UK Independent Party | 24 | |

EFDD가 추구하는 정강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 “자유 및 서로 다른 국가 사람들 사이의 협력”
-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와 인민(People)의 의지 존중”
- “유럽의 역사, 전통, 문화적 가치의 존중”
- “국가적 차이 및 이익의 존중: 투표의 자유”

EFDD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UN의 인권선언과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원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을 선언하면서 위와 같은 4가지 계획(Program)을 천명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유럽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선호하면서도 유럽차원의 관료화(bureaucratisation)와 일원화된 중앙집중제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지방 수준,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에는 호응하지만, ‘단일한 유럽인(a single European people)’이라는 관념에는 반대한다. 즉, 유럽연합의 존재 자체에 강력한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과 관련된 모든 조약

²⁵ EFDD Charter, <http://www.efdgroupp.eu/about-us/our-charter> (검색일: 2014.07.20).

과 정책에는 반기를 드는데 그 이유는 유럽통합이 유럽연합의 중앙집중적 정치 구조를 강화시키고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t)을 보다 악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국민들이 유럽통합에 대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를 국민투표(referenda)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의지에서 나온 힘만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고 믿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들 또 국가단위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경을 지키며 역사와 전통, 종교 및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혐오(xenophobia)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그리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7> 유럽회의주의 정파(EFDD)의 변천

| 그룹명 및 연도 | 국가 | 정당 명 | 의원 수 |
|---|--|---|-----------------------|
| Europe of Nations (1994~1996) | 프(13), 덴(4), 네(2) | Majorité pour l'autre Europe(프), Juni Bevægelsen (덴), People's Movement against the EU(덴), SGP-GPV(네) | 19 |
| Independents for a Europe of Nations (1996~1999) | 프(8), 덴(4), 네(2), 영(1) | Majorité pour l'autre Europe(프), JuniBevægelsen (덴), People's Movement against the EU(덴), SGP-GPV-RPF (네) Ulster Unionist Party(영) | 15 |
| Europe of Democracies and Diversities (1999~2004) | - | UKIP(영), Chasse, Pêche, Nature, Traditions (프), Combats Souverainistes (프), Christian Union - Reformed Political Party(네), League of Polish Families(폴), JuniBevægelsen(덴) | 16 |
| Independence/Democracy Group (2004~2009) | 시기별로 각국별 인원의 증감이 있음 | UKIP(영), Libertas France(프), ChristenUnie - SGP(네), Popular Orthodox Rally(그), JuniBevægelsen(덴), Movement for France(프), Independent Democrats(체), League of Polish Families(폴), Independent(아), Lega Nord(이), LAOS(이), Junilistan(스), Nezavisli(체) | 37(2004) - 18(2009) |
| Europe of Freedom and Democracy (2009~2014) | 벨(1), 불(1), 덴(1), 핀(1), 프(1), 그(2), 이(10), 리(2), 네(1), 폴(4), 슬(1), 영(10) | Frank Vanhecke(벨), People for Real, Open and United Democracy(불), Danish People's Party(덴), The Finns Party(핀), Movement for France(프), Popular Orthodox Rally(그), Lega Nord(이), I Love Italy(이), Order and Justice(리), Reformed Political Party(네), United Poland(폴), Slovak National Party(슬), UKIP (영) | 35 (시기별로 의원수의 증감이 있음) |
|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 체(1), 프(1) 이(17), 라(1) 리(2), 스(2) 영(24) | Strana svobodných občanů(체), Joëlle Bergeron(프), MoVimento Cinque Stelle (이), Zaļo un Zemnieku savienība(라), Tvarka ir teisingumas(리), Sverigedemokraterna(스), UK Independent Party(영) | 48 |

c. 유럽좌파 연합/노르딕 녹색 좌파(Gauche Unitaire Européenne/Nordic Green Left: GUE-NGL)

ECR과 EFDD가 보수-우파적인 성격에서 유럽회의주의자라고 한다면, GUE-NGL은 좌파적 기반에서 유럽회의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GUE-NGL의 전신인 'European United Left'가 1994년에 제시한 강령(declaration)에 따르면 이들은 '완벽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신 자유주의적 화폐정책은 폐지'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해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지금에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행태에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은 국가 자본을 선거를 통해 선임되지 않은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으로 이전시키는 행태로 보며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고용정책에는 보다 좋은 일자리, 노동자의 권리와 향상된 노동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며, 경제적 위기는 특히 여성 평등에 위협이 되므로 직장 내에서의 여성평등을 포함하여 성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8> GUE-NGL(Gauche Unitaire Européenne/Nordic Green Left)의 구성(2014년 선거)

| 국가 | 정당(정파) 명 | 의원 수 |
|-------|--|------|
| 사이프러스 | Ανορθωτικό Κόμμα Εργαζόμενου Λαού | 2 |
| 체크 | Komunistická strana Čech a Moravy | 3 |
| 핀란드 | Vasemmistoliitto | 1 |
| 덴마크 | Folkebevægelsen mod EU | 1 |
| 프랑스 | Front de gauche(3), Alliances des Outre-Mers(1) | 4 |
| 독일 | Die Linke(7), Mensch Umwelt Tierschutz(1) ²⁶ | 8 |
| 그리스 | Συνασπισμός Ριζοσπαστικής Αριστεράς, Synaspismós Rizospastikís Aristerás(SYRIZA) | 6 |
| 아일랜드 | Sinn Féin(3), Luke 'Ming' Flanagan(개인) | 4 |
| 이탈리아 | L'Altra Europa | 3 |
| 네덜란드 | Socialistische Partij(2), Partij voor de Dieren(1) ²⁷ | 3 |
| 포르투갈 | Bloco de Esquerda(1), Coligação Democrática Unitária (3) | 4 |
| 스페인 | Izquierda Unida(5), Podemos(5), Los Pueblos Deciden(1) | 11 |
| 스웨덴 | Vänsterpartiet | 1 |
| 영국 | Sinn Féin | 1 |

²⁶ '동물보호당.'

²⁷ '동물당.'

세계 평화는 인권보장에 기반을 두고 제3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이뤄야 하며 유럽의 농업, 무역, 에너지 정책들은 모두 UN이 채택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주(移住)는 유럽연합뿐 아니라 회원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중요한 인간이 누리는 기본권으로 이주자들에 대해서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지구 온난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1. 이론적 논의

유럽회의주의를 조망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보조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다. 앞서 살핀 것처럼 유럽회의론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따르기보다는 유럽연합의 ‘보조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Subsidiarity/Proportionality)’이 전통적 의미의 주권(sovcreignty)과의 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따라서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발호와 유럽회의주의의 연관은 적어도 ‘이론적’ 근거에서는 미약하다. 이것은 GUE/NGL의 강령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만, 유럽회의주의가 실천의 영역, 또는 일반 유럽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민족주의 관념과 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회복이다. 최근 유럽의회의 회의론자들은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핍(deficit of democracy)’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²⁹ 2005년의 유럽헌법 부결이 유럽의 확대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했다면, 작금의 유럽회의주의는 유럽통합의 심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유럽회의주의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즉,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다 큰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최근의 유럽회의론은 국가 단위의 ‘주권’을 넘어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제도적 구성과 충돌하는 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동물 보호를 기치로 내건 정당의 출현이

²⁸ Subsidiarity/Proportionality원리는 TEU 5조에 근거하고 있다.

²⁹ 예컨대, “The day we got EU parliamentarianism,” Jens-Peter Bonde. <http://euobserver.com/opinion/124968> (검색일: 2014.07.15).

그러한 현상을 설명해 준다. 유럽회의론자들은 개인의 자유가 보다 더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담보해주는 장치가 민주주의 원리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은 의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때 개인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권리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토론의 필요성은 유럽회의론을 구분할 때 고전적 의미의 ‘강한 회의주의’와 ‘약한 회의주의’의 구별보다는 가치에 따른 구분이 보다 적실해 보이는 이유가 된다. 넷째,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는 작은 배보다 큰 배가 낫다(When the sea is rough it is safer to be in a large ship than a small boat)’는 류(類)의 통합 당위론이 유럽회의론자들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더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2. 유럽회의주의가 유럽연합 제도에 미치는 영향: 거버넌스에서 인적 구성

2014년은 유럽의회 의장뿐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외교대표(High Representative), 유럽이사회 상임의장(President of European Council) 등이 새로 구성되는 해이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정파별 구성은 이후 구성되는 유럽연합 제도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선거는 2009년 11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출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후 첫 선거였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주류 정파인 EPP와 S&D가 의석을 잃고, 유럽회의론자들이 약진한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회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관심사이다.³⁰

7월 말 현재, EPP 대표에 선임된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내정되었고 마틴 슈츠(Martin Shultz) S&P 유럽의회 의장은 연임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유럽회의론자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럽의회 정국 주도권은 여전히 EPP와 S&P가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³¹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임의장 후보로는 덴마크의 헬레 토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사회당), 안드루스 안습(Andrus Ansip) 전 에스토니아 총리(ALDE성향), 발디스 돔브로프스키(Valdis Dombrovskis) 전 라트비아 총리(EPP) 등이, 외교대표로는 이탈리아 외무장관 페드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S&P성향) 장관, 폴란드의 라데크 시코르스키(Radek Sikorski) (EPP성향)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적구성은 유럽통합론 : 유럽회의론보다는 좌/우 안배, 동/서유럽 안배에 더 초점이

³⁰ 유럽연합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적 구성은 11월이나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³¹ 두 정파를 합친 의석 수는 470석(274+196)에서 412석(221+191)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 정파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맞춰져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회의론자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럽연합의 양적통합 기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질적 통합에서는 회의주의론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헝가리 등에 가해졌던 긴축재정 요구는 향후 새로운 사태 발생 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목소리가 커진 회의론자들은 브뤼셀 중심의 정책 결정이 국내의 정책 수행에 지나친 간섭이 되는 것을 극구 막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회의주의 정파의 약진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의는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³² 탈퇴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차기 집행위원회 구성에 앞서 영국은 새로운 집행위원 후보로 탈퇴 여부에 대해 통합/회의론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존 힐(Lord Jonathan Hill)경을 지명했는데, 이는 현재 영국의 입장을 상징하는 인선으로 해석된다. 차라리 영국은 유럽연합 내에 남되 유럽연합과 제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한-EU 관계

첫째,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중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유럽의 가치 전파 차원에서는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럽회의론자들 중에는 동물보호를 주요 이슈로 삼는 정당소속의 의원도 있기 때문에 가축 위생 등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 양자가 무역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따라서 2010년 ‘한-EU 기본 협정’상에 등장하는 각 조항에 대해 정책 리뷰를 재검토하면서 다양한 대응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의회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이념별, 국가별, 지향성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 집행위원회 중심 외교에서 대 의회 중심 외교로의 무게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개별 프로파일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살핀대로 유럽의회의 정파는 국내의 정당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룹별 분류와 더불어 각 인적 성향에 대한

³² “UK foreign minister favours leaving EU if no reforms”, Euobserver, <http://euobserver.com/political/125054> (검색일: 2014.07.21).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보조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또한 회의론자들의 주요 원칙이므로, 정치적·경제적 교류뿐 아니라 시민·사회적 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주권에 민감한 사안보다는 비정치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때 유럽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워진다.

2. ‘통합 모델’로서 EU에 대한 재고

최근 유럽회의주의자들의 쟁점 사안이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와 ‘통합’의 양립 문제는 향후 이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통합의 확대를 넘어 심화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를 가정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 방법을 토론하면서,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 보다 유연한 태도의 민주주의적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ex. 하버마스의 숙고 민주주의).

마지막으로 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표 1, 2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유럽연합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 미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유럽 통합은 양적 통합보다는 질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양적, 기능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경우, 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종 부작용 - 소득불평등, 인종차별, 다문화 등 - 에 대한 성찰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일부)

김상수, 영국 보수당의 “유럽혐오주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을 중심으로”(2010)

김신규, “중,동부유럽의 유로-회의론(Euro-scepticism) 연구: 회의론의 원인과 패턴을 중심으로”(2008)

최진우,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2012)

Bonde, Jens-Peter, “The day we got EU parliamentarianism”, <http://euobserver.com/opinion/124968> (2014.07.15일자)

Burnyeat, M., (ed.), *The Skeptical Tradition* (1983)

David Cameron’s EU speech,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eu/9820230/David-Camersons-EU-speech-in-full.html> (검색일: 2014.07.10)

- David Cameron speech, “UK and the EU”,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1170265> (검색일: 2014.07.10)
-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Charter, <http://www.efdgroupp.eu/about-us/our-charter> (검색일: 2014.7.20)
-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Election 2014”, <http://www.elections2014.eu/en> (검색일: 2014.07.20)
- Euobserver, “UK foreign minister favours leaving EU if no reforms”, Euobserver, <http://euobserver.com/political/125054> (검색일: 2014.07.21)
- Leconte, Cécile, Understanding Euroscepticism (2010)
- Madeley, J. & N. Sitter, “Differential Euroscepticism among the Nordic Christian Parties: Protestantism or Protest?” (2003)
- Parsons, Craig, A Certain Idea of Europe (2006)
- Popkin, R. H., The History of Skepticism from Erasmus to Descartes (1968)
- Stough C. L., Greek Skepticism (1969)
- Stroud, B.,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Skepticism (1984)
- Taggart, Paul., Szczerbiak, Aleks, “Introduction: Opposing Europe? The Politics of Euroscepticism in Europe” (2008)
- Thatcher, Margaret, “Speech to the College of Europe”,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7332> (검색일: 2014.07.20)
- The European Commission, STANDARD EUROBAROMETER 78 (2012)
- The Observer, “56% of Britons would vote to quit EU in referendum, poll finds”, 2012년 11월 17일자.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2/nov/17/eu-referendum-poll> (검색일: 2014.07.20)



(우)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227-24 Jungmun Gwangwang-ro, Seoguipo-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Tel: (+82-64) 735-6500 Fax: (+82-64) 735-6522

E-mail: jpiresearchforum@jpi.or.kr

www.jpi.or.kr